GS건설, '비욘드 리빙' 비전 공유… AI 기반 주택가치 확장

자이 미래전략 발표회

고객경험 중심 브랜드 전략 구체화
'AI 홈' 등 미래 주거 핵심상품 소개
"입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지난 16일 '자이 미래전략발표회'를 열고 있다. /GS건설

오후 4시, 아이가 먼저 집에 들어오면 거실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가스밸브가 잠기며 부모의 휴대전화로 알림 메시지가 간다. 잠이 들자 조명이 꺼지고 에어컨은 취침 모드로, 공기청정기는 저소음 모드로 바뀐다. "이번 주는 골프 연습을 한 번도 못 하셨네요"라며 비어 있는 시간을 찾아 예약하고 캘린더에 일정까지 넣어준다. GS건설이 그리는 자이(XI)의 미래 주거 모습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자이 미래전략 발표회 '리이볼브(RE:EVOLVE)'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것, 그것이 자이가 지향해 온 도전 방식"이라며 "자이가 지켜온 가치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브랜드 자이의 중장기 비전은 '비욘드 리빙(BEYOND LIVING)'이다. 지난 2024년, 22년 만에 자이 브랜드를 새롭게 정비한 이후 약 2년간 추진해 온 고객 경험 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구체화했다.

서아란 GS건설 브랜드전략부문장은 비욘드 리빙에 대해 "집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주거 공간의 물리적 가치와 기능을 넘어 고객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변화에 맞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래 주거상품에는 인공지능(AI)과 공간 혁신, 기후 대응 기술을 접목했다. 3대 핵심 주거상품은 ▲거주자의 생활을 이해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집 'AI 홈(Home)' ▲생애주기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아이엑스 플랫폼(IX Platform)' ▲기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클리마 시스템(Clima System)' 등이다.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은 "미래의 집은 나를 이해하고 스스로 작동하며, 가족의 생애주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집이어야 한다"며 "입주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함께한 시간만큼 거주자를 더 잘 이해하고 사는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스마트홈의 기술 진화를 6단계로 구분한 주거 자율화 레벨 체계(LHA)를 정립했다. 현재 국내 공동주택 스마트홈은 규칙 기반 자동화 수준인 레벨 1~2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주자의 상황을 인식해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실행하는 3단계 '상황인식 자동화'를 추진해 내년 하반기 분양 단지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호출이나 커뮤니티 시설 예약은 물론 "어젯밤 어디에 주차했지?" 같은 질문에도 답한다. 집에 혼자 있던 부모가 갑자기 쓰러지면 센서가 응급 상황을 인지해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로 알림을 보낸다.

보안 문제는 카메라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풀었다. 이 부문장은 "카메라에는 불필요한 고객 정보가 너무 많이 담기기 때문에 카메라 대신 모션 센서만 쓰기로 했다"며 "모션 센서만으로도 거주자가 자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호흡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기 안에서 정보를 처리해 상황을 판단하는 엣지 디바이스 방식을 적용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했다.

이 부문장은 "단지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기후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주요 시설이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방재 시스템과 빗물 재활용 등 자원 순환 기술을 연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에 공개한 미래 주거상품을 통해 주택의 가치를 입주 시점의 상품성과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거주하는 동안 고객이 경험하는 생활의 질까지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지 입주민을 위해서는 내년 3월 자이 홈 앱 2.0을 내놓아 사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금융권, 지역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나선다

3년간 4.5조 규모 저리 보증부 대출
금융위, 지자체 공모 통해 차등배분

금융권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번 대출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자체 이차보전을 결합한 방식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별로 지원 규모를 차등 배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은행이 향후 3년간 3000억원을 신보 및 기보에 특별출연해 보증 재원을 지원하면 신보와 기보가 약 15배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지역 핵심기업을 발굴 및 추천하며, 자체 재원을 통해 협약보증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5극 3특 균형발전 지원사업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차등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사업(3년간 3조7400억원)은 사업 초반에는 시·도 단위로 균형 있게 지원하되, 2027년 중으로 사업이 안착되면 사업 추진역량 등을 평가해 최우수(3개 지자체) 3800억원, 우수(5개) 2800억원, 보통(5개) 2400억원으로 지원을 차등한다. 또한 오는 2027년 예정된 2차 공모(2년간 7600억원)에서는 시·도 간 자유로운 협력이 가능한 초광역 협력형 공모도 진행한다.

사업 평가는 정량지표 60점 및 정성지표 40점으로 나눠 실시한다. 정량지표에 포함되는 지역금융 취약도는 금융위가 매년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활용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금융 인프라(점포·자동화기기 수)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정책부합도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지역금고 선정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노력과 타 부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수준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오는 2027년 1월까지 1차 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 제안서를 심사한다는 목표다. 또한 내년 1분기 평가결과 발표 후 필요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보증부 대출을 지체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9000개 이상의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일반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담보·신용도 문제로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기업도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투자·고용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감원, 전자금융·온투업계 보안체계 점검

'침해사고 대응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침해사고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부접점 집중점검의 충실한 이행과 보안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전자금융업자 227개사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47개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보안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해사고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활용 해킹 등 금융권을 겨냥한 침해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안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규모 전금업자와 온투업자의 보안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부 회사에서는 모바일 쿠폰·예치금 등 자금 탈취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전 금융권 외부접점 집중점검의 취지와 진행 방향,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방화벽 기준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접점 내 모든 IT자산·서비스·API 등을 식별해 점검 및 보완하고, 이를 운영하는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도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안승진 기자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완화

75% 이상 →70% 이상… 전문기관 추가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내년부터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결혼 패널티'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각 동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했다.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물 위쪽으로 층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기존 건물이 추가 무게를 견뎌야 하므로 구조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검토를 맡아 심사 지연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된다.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이사하면 특별공급·일반공급 여부나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른바 '결혼 패널티'도 없앤다. 조합원끼리 결혼해도 세대주 요건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제외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채리 기자 cr56@

카카오뱅크, 'AI 목표적금' 10만좌 돌파

1분마다 약 2개 계좌 신규 개설

카카오뱅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의 저축 습관 형성을 돕는 'AI 목표적금'이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10만 좌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출시된 AI 목표적금은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 달 동안 약 10만 명이 가입했다. 1분마다 약 2개의 계좌가 새로 개설된 셈이다.

AI 목표적금은 고객이 설정한 저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AI가 단계별로 조언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납입하고 만기 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최고 연 5.00%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AI가 고객의 저축 목표 설정부터 추가 납입까지 지원하는 기능이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입 고객 3명 중 2명은 AI가 제안한 목표 금액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 수입이 발생한 날 AI의 추가 납입 권유를 통해 서비스에 진입한 고객 중 약 70%는 실제 추가 납입으로 이어졌다. 전체 가입 고객 10명 중 9명은 12개월 만기를 선택했으며, 5명 중 1명은 여행 관련 키워드를 저축 목표로 설정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입 비중이 2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이상 26.4%, 30대 23.4%, 20대 이하 21.2% 순이었다. 40대 이상 가입자가 전체의 55.4%를 차지하면서 중장년층에서도 AI 기반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 기자 yul115@